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자 초청 시민사회 간담회 질의서

현장 질의서

○ 질의/응답은 총 6문항이며, 질의 1분, 답변 4분으로 함

1 교통 분야 : 대중교통 및 친환경 교통수단 전환정책

서울시는 GTX 개통·경전철 확충, 기후동행카드, 따릉이 운영 등 다양한 대중교통 및 자전거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승용차 이용 부담률이 증가하고 대중교통 이용률은 오히려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동시에 2035년 내연기관차 신규 등록 금지와 2050년 운행 제한이라는 강력한 탄소중립 목표를 제시했지만, 무공해차 전환 속도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정책 간 괴리를 고려할 때, 단순한 교통 인프라 확대를 넘어 승용차 이용을 실질적으로 억제하고 대중교통 및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의 전환을 강제할 수준의 정책적 수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후보자께서는 '30분 통근 도시' 공약에서 제시한 교통 인프라 공급 외 수단 전환 정책을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인지, 또한 내연기관차 등록 금지 및 운행 제한 목표를 임기 내에서 실질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한 단계별 실행 전략과 수단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환경 분야 : 자원순환 및 쓰레기 원천 감축 정책

수도권매립지의 직매립 금지 조치에 따라, 지난 2023년 서울시는 마포구에 하루 1,000톤 규모의 신규 소각장 건설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마포구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고, 주민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서울시는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습니다. 이로 인해 서울에서 발생하는 쓰레기가 비수도권의 민간 처리시설에서 소각되면서 비용 증가와 공공성 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쓰레기의 원천 감축과 실효성 있는 처리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후보님께서 어떤 자원순환 정책과 쓰레기 원천 감축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3 자치 분야 : 주민자치 및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 대안

풀뿌리 주민자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핵심 원인은 정보, 참여, 권한의 구조가 갖춰지지 않은 탓입니다. 지역의 주요 정책과 사업을 주민결정 초기 단계부터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와 더불어 지역계획과 예산 역시 이미 결정된 이후가 아닌 초기부터 주민이 공동으로 계획하고 결정할 수 있는 개입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치 권한과 재정이 중앙이나 상급 기관에 집중된 것을 재배분하여 지역의 자율성을 확보할 방안이 마련돼야 명실상부한 주민자치,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시 여성·성평등 정책은 조직, 실행체계, 재정 기반 전반에서 축소·퇴행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성평등위원회는 분과위원회 폐지, 서면회의로 대체되는 등 기능이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성평등 정책 전담부서(여성가족정책실) 또한 명칭과 기능이 축소되며 정책 총괄·조정 기능이 약화되었고, 정책 방향 또한 성평등 실현에서 출생·양육 중심으로 이동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 등 시민과 직접 접점을 형성하는 현장 기반의 성평등 정책 실행기관 및 중간지원조직이 폐지 또는 통폐합되면서 성평등 정책의 현장 전달체계는 사실상 해체되었습니다. 성평등기금 역시 지원대상에 기업이 추가되는 등 기금의 용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서울 지역에서 디지털 성폭력, 스토킹, 친밀한 관계 내 폭력 등 젠더폭력이 심화되는 가운데, 학교·기관·직장 내 예방과 피해지원 체계 강화 필요합니다. 또한 피해자 지원기관 및 현장과의 실질적 협력체계 구축, 여성건강·이주여성 지원기관에 대한 안정적 지원이 필요하고, 여성폭력 피해자의 자립 과정에서 높은 임대료와 실효성 낮은 공공임대주택 제도로 주거 불안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 드립니다.

성평등위원회, 여성가족정책실, 성평등 정책 실행기관 및 중간지원조직 등 서울시 성평등 추진체계를 복원, 강화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젠더폭력 방지를 위해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5 장애 분야 : 장애인콜택시 및 권리중심 해고 노동자 복직

서울시는 장애인콜택시를 증차했지만 운전원은 증원하지 않아, 실제 운행률 30%, 최대 대기시간 5시간의 현실을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증차가 아닌 증원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또한 중증장애인 권리중심노동자 400명을 집단해고 했고, 그 근거였던 불법 시위 동원·보조금유용 형사고발은 올해 4월 전면 무혐의로 종결됐습니다.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간담회에서 서울시가 실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는 차량 1대당 운전원 2명 정규직 확보와 해고 노동자 400명 원직 복직, 후보자께서 공약으로 담아주실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6 사회연대경제 : 사회연대경제 시·자치구·민관협력체계 구축

서울시 사회연대경제 정책과 예산은 오세훈 시장 시절 급격하게 축소되었습니다. 이에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첫째, 행안부 정책과 연계하여 서울시에 사회연대경제국 신설 등을 공약으로 담아주실 수 있는지요?

둘째, 서울 사회연대경제지원센터와 25개 자치구 센터 간 사업적 연계 방안에 대해 계획이 있으신가요?

셋째, 서울 민간의 주체들과 기획 단계부터 함께하는 민관 협의 구조에 대한 후보자님의 생각은 있으신가요?

* 예정된 토론시간이 여유가 있을 경우 보충질문을 함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시절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표 용산어린이정원의 오염 문제, 졸속 개방 문제를 날카롭게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 당선 후 대통령실을 청와대로 이전했고 주한미군기지 반환부지 제염 책임이라는 정치적·외교적 문제 앞에 아동의 건강권을 방기하는 모습입니다.

부는 토양을 완전히 교체하거나 정화하는 대신, 오염된 흙 위에 15cm 두께의 새 흙을 덮고 잔디나 매트를 깔았습니다. 이 경우 잔디가 패이거나 흙이 유실될 경우 하부 오염 토양이 공기 중에 노출되고, 식물 뿌리가 15cm보다 깊게 내려갈 경우, 오염 물질을 지상부로 끌어올릴 위험이 있습니다.

후보님께 묻습니다.

- 서울시는 오염물질을 완전히 정화될 때까지 국토교통부에 용산어린이정원 폐쇄를 공식적으로 요구할 의사가 있습니까?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하여금 부지 내 토양 및 수질 조사, 오염물질에 대한 위험도 조사를 실시할 의향이 있습니까?

서면 질의서

※ 초청토론회 참여단체들이 질의를 준비했으나 간담회 시간제한으로 인해 질문을 하지 못한 의제들을 서면으로 전달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후보자는 5월 8일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과 관련하여 '토지는 서울시가 보유하고 개발권은 민간이 활용하는 방식'을 언급하며, 개발권 매각(1조원 재원 확보), 장기 임대료 수입, 개발 후 자산가치 상승 등을 도모하겠다고 밝혔음.

국공유지 민간 매각에 대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경실련은 오세훈 시장 재임 당시(2022. 7. 26.) 서울시가 발표했던 용산 정비창 개발계획에 대해서 '용산 정비창 부지가 알짜배기 국공유지인만큼, 민간재벌의 불로소득으로 변질되지 않고, 서울시민 모두의 공공자산으로 활용되어야 함'을 촉구한 바 있음.

그간 우리나라는 공공이 강제수용한 토지, 기존 보유한 토지 등 국공유지를 민간 사업자에게 헐값에 매각하는 사례가 많았음. 즉 개발에 대한 이익이 일부 건설업자와 투기꾼들에게 돌아가는 상황까지 발생하였음. 이에 따라 국공유지 개발 원칙이 분명히 있어야 함.

-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방식을 발표한 바와 같이 토지는 서울시가 보유, 개발권이 민간이 활용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 용산국제업무 지구 외의 다른 개발에서도 서울시가 보유한 국공유지를 매각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적용할 것인가?

녹색교통운동

1. GTX, 경전철 등 서울의 대중교통 시설 공급과 기후동행카드, 따릉이 등 대중교통과 자전거등에 대한 이용 확대 정책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 이용률이 높아지지 않고 오히려 분담율이 떨어지고 있음.(승용차 이용 분담율은 오히려 증가).
 - 30분 도시에서 제시한 대중교통(철도망) 공급과 환승센터, 모두의카드 확대만으로는 교통수단을 전환시키기에는 여전히 부족할 것으로 보이는데 승용차 이용을 억제해 대중교통으로 수단 전환을 강력하게 유도할 대책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2. 서울시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위해 2035년 내연기관차 등록 금지, 2050년 서울 전지역 내연차 운행제한 계획이 있음
 - 무공해차 보급 실적(특히 버스,택시)이 미흡한 상황에서 등록금지와 운행제한에 대한 임기 내 구체적인 이행 계획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문화연대

1. 민선 8기 서울시 산하 문화예술기관에는 과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와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었다는 비판을 받는 인사들이 기관장 및 주요 보직에 임명되며, 문화행정의 공공성과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후보자는 문화예술기관 인사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기관장에 대한 평가·견제 시스템 마련과 시민 참여 기반 문화거버넌스 구축 등 문화행정 혁신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2. 현재 서울시 문화정책은 한강·도심 중심의 대규모 관광개발에 집중되면서 생활문화센터·마을예술창작소 등 지역 기반 문화정책은 축소되고, 지역 간 문화격차 역시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후보자는 시민의 생활권 기반 문화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문화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며, 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지역경제의 선순환, 지역문화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관광 수익이 지역에 환류되는 지역문화 연계형 공정관광 정책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환경연합

1. [에너지·건물] 에너지 자립과 건물 온실가스 감축 정책

서울의 부동산 정책은 서울시장 선거의 핵심 쟁점입니다. 그러나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량의 70%를 차지하는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은 부동산 개발 논리에 밀려 제대로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 재개발·재건축 사업 진행 시, 건물의 온실가스 배출을 어떻게 관리·규제하실 계획입니까?
- 노후화된 기존 기축 건물에 대한 저탄소 효율화 대응 방안은 무엇입니까?
- 후보님께서 공약하신 히트펌프 보급 등 '난방의 전기화'가 이루어질 경우 전력 수요가 급증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에너지 공급 및 수요 관리 대책은 무엇입니까?

2. 오세훈 시장의 한강버스, 노들섬 등 한강 개발 공약과 더불어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서울시 내 하천 개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어

왔습니다. 한강과 그 지천들은 서울의 핵심 생태축인 동시에, 갈수록 심화되는 홍수와 집중호우 등 기후재난에 대응하는 주요한 보루이기도 합니다.

- 후보님께서 구상하시는 한강과 지천의 미래 비전은 무엇이며, 지속가능한 도시와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입니까?

3. AI 공약 실행에 따른 탄소중립 정책과 주민 수용성 문제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이번 2026년 지방선거의 주요 의제가 되었습니다. 후보님께서도 '15분 AI 도시', '양재 연구-구로·가산 실증'을 연계한 '피지컬 AI 실증특구' 등을 공약하신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금천구의 사례처럼 데이터센터 건설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고, AI 기술 발전과 데이터센터 확대에 따른 막대한 전력 수요 증가는 탄소중립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 후보님께서 서울의 탄소중립 목표와 AI 산업 확대를 어떻게 균형감 있게 추진하실 계획이며, 데이터센터 건립 등에 따른 지역 주민의 수용성은 어떻게 확보하실지 질의드립니다.

4. 수도권매립지의 직매립 금지 조치에 따라, 지난 2023년 서울시는 마포구에 하루 1,000톤 규모의 신규 소각장 건설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마포구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고, 주민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서울시는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습니다. 이로 인해 서울에서 발생하는 쓰레기가 비수도권의 민간 처리시설에서 소각되면서 비용 증가와 공공성 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쓰레기의 원천 감축과 실효성 있는 처리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 후보님께서 어떤 자원순환 정책과 쓰레기 원천 감축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서울시 각종 위원회는 시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안을 심의·의결하는 핵심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시민이 어떤 안건이 언제 논의되는지 미리 알고 그 과정을 확인할 수 있을 때, 실질적인 의견을 낼 수 있고 행정의 의사결정도 더 풍부한 시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법이 ‘공개가 원칙, 비공개는 예외’이듯, 서울시 위원회 회의도 개인정보·보안 등 비공개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안건을 사전에 공개하고 논의 과정을 시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하는 기본 조례를 제정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함께하는 시민행동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시민참여예산제도의 제안사업수는 19년 대비 17.5% 수준으로 하락하였고, 부서 부적격판정 비율이 증가하여 최종 편성된 공모사업 예산 규모는 19년 대비 2.2% 수준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숙의 과정 및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의 규모 축소, 지원협의회 미운영, 자치구와의 제도 협력 중단 등 운영 또한 형해화 된 상황입니다.

- 후보자는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의 복원을 위한 제도 운영 개선과 예산·재정 분야 전반의 시민참여 및 접근성 확대를 위하여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서울기후위기비상행동

오세훈시장의 한강 정책은 '시민과 자연은 없고 개발과 전시만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지만 서울시장의 위상과 정원오후보의 비전을 고려할 때, 정원오후보께서도 서울의 랜드마크이자 주요한 갈등인 한강이슈에 대해 분명한 정책 발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다음 두 가지를 질문드립니다.

1. 한강과 지천의 생태 전환

오세훈 시장의 한강버스, 노들섬 등 한강 개발 공약과 더불어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서울시 내 하천 개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어 왔습니다. 한강과 그 지천들은 서울의 핵심 생태축인 동시에, 갈수록 심화되는 홍수와 집중호우 등 기후재난에 대응하는 주요한 보루이기도 합니다.

- 정원오 후보님께서 구상하시는 한강과 지천의 미래 비전은 무엇이며, 지속가능한 도시와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질의드립니다.

2. AI 공약 실행에 따른 탄소중립 정책과 주민 수용성 문제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이번 2026년 지방선거의 주요 의제가 되었습니다. 후보님께서도 '15분 AI 도시', '양재 연구-구로·가산 실증'을 연계한 '피지컬 AI 실증특구' 등을 공약하신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금천구의 사례처럼 데이터센터 건설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고, AI 기술 발전과 데이터센터 확대에 따른 막대한 전력 수요 증가는 탄소중립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 후보님께서 서울의 탄소중립 목표와 AI 산업 확대를 어떻게 균형감 있게 추진하실 계획이며, 데이터센터 건립 등에 따른 지역 주민의 수용성은 어떻게 확보하실지 질의드립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1. 이동권 - 장애인콜택시 운전원 정규직 증원

서울시는 장애인콜택시를 증차했지만 운전원은 증원하지 않아, 실제 운행률 30%, 최대 대기시간 5시간의 현실을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증차가 아닌 증원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 후보님께서서는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간담회에서 약속한 바 있는 차량 1대당 운전원 2명 정규직 확보,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있으신지, 공약으로 담아주실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2. 노동권 - 권리중심공공일자리 해고노동자 400명 원직복직

오세훈 시장은 중증장애인 권리중심노동자 400명을 집단해고했고, 그 근거였던 불법시위동원·보조금유용 형사고발은 올해 4월 전면 무혐의로 종결됐습니다. 해고는 처음부터 근거가 없었습니다.

- 후보님께서서는 지난 1월 예비후보 간담회에서 약속한 바 있는 해고노동자 400명 원직복직 및 사업 복원,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있으신지, 공약으로 담아주실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서울풀뿌리시민사회네트워크

1. 풀뿌리 주민자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핵심 원인은 정보, 참여, 권한의 구조가 갖춰지지 않은 탓입니다. 지역의 주요 정책과 사업을 주민결정 초기 단계부터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와더불어 지역계획과 예산 역시 이미 결정된 이후가 아닌 초기부터 주민이 공동으로 계획하고 결정할수 있는 개입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치권한과 재정이 중앙이나 상급기관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재배분하여 지역의 자율

성을 확보할 방안이 마련돼야 명실상부한 주민자치, 풀뿌리 민주주의가 안착할 수 있습니다.

- 후보님의 주민자치 및 풀뿌리민주주의 안착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말씀해주십시오.

2. 주민자치회 전면 확대와 실질화를 위해서는 자립성, 독립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 주민자치 의사결정 구조의 기본단위가 '동'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주민의제 발굴 및 숙의, 주민총회, 자치계획 수립, 주민투표, 주민발안 지원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 기능을 강화하는 정책이 마련돼야 합니다. 더불어 주민총회 등에서 논의되고 수렴된 주요 안건이 휘발되지 않고 자치구와 동 행정의 공식적으로 검토·반영 및 회신하도록 하는 것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 후보님께서서는 이를 위한 정책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지난 행정부에서는 의도적으로 풀뿌리공동체를 지우고자 했습니다. 민주주의의 기초가 튼튼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풀뿌리 지역공동체에 대한 새로운 비전과 정책이 필요합니다.

- 후보님께서서는 과거 마을정책의 단순한 회복이 아닌 광장이후 주권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비전과 정책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후보님은 자치구 시행계획, 동 단위 실행계획이 연계되는 종적 체계 구축과 지역내에서도 주민자치, 지역공동체, 사회연대경제, 마을교육공동체, 비영리민간단체, 돌봄, 기후위기 대응 활동 간 횡적 유기적 연계를 위한 지역생태계 지원체계 등 풀뿌리정책 청사진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하는 엄마들

1. 용산어린이정원 폐쇄의 건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시절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표 용산어린이정원의 오염 문제, 졸속 개방 문제를 날카롭게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 당선 후 대통령실을 청와대로 이전했고 주한미군기지 반환부지 제염 책임이라는 정치적·외교적 문제 앞에 아동의 건강권을 방기하는 모습입니다.

정부는 토양을 완전히 교체하거나 정화하는 대신, 오염된 흙 위에 15cm 두께의 새 흙을 덮고 잔디나 매트를 깔았습니다. 이 경우 잔디가 패이거나 흙이 유실될 경우 하부 오염 토양이 공기 중에 노출되고, 식물 뿌리가 15cm보다 깊게 내려갈 경우, 오염 물질을 지상부로 끌어올릴 위험이 있습니다.

- 서울시는 오염물질을 완전히 정화될 때까지 국토교통부에 용산어린이정원 폐쇄를 공식적으로 요구할 의사가 있습니까?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하여금 부지 내 토양 및 수질 조사, 오염물질에 대한 위험도 조사를 실시할 의향이 있습니까?

2. 노키즈존 금지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식당에서 9세 아동의 출입을 금지한 것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고, 2019년 UN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에 대한 심의에서 노키즈존 관행에 우려를 표하면서 “아동이 상업 시설을 포함한 공공장소에 접근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현재 서울은 성수, 연남, 한남 등 이른바 ‘핫플레이스’ 소재한 카페와 식당을 중심으로 노키즈존이 밀집해 있습니다.

- 후보님께서 노키즈존 금지 조례를 제정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어린이의 출입을 제한할 수 없다는 원칙을 명시할 의향이 있습니까?
- 후보님은 공공기관 및 공공부지 내 노키즈존 여부를 전수 조사하고, 아

동·청소년을 환대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대대적인 캠페인을 실시할 의향이 있습니까?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성폭력 상담소

1. 서울시 여성·성평등 정책은 조직, 실행체계, 재정 기반 전반에서 축소·퇴행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성평등위원회는 분과위원회 폐지, 서면회의로 대체되는 등 기능이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성평등 정책 전담부서(여성가족정책실) 또한 명칭과 기능이 축소되며 정책 총괄·조정 기능이 약화되었고, 정책 방향 또한 성평등 실현에서 출생·양육 중심으로 이동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 등 시민과 직접 접점을 형성하는 현장 기반의 성평등 정책 실행기관 및 중간지원조직이 폐지 또는 통폐합되면서 성평등 정책의 현장 전달체계는 사실상 해체되었습니다. 성평등기금 역시 지원대상에 기업이 추가되는 등 기금의 용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서울시의 여성·성평등 정책은 축소·퇴행되었습니다.

- 후보님은 축소·퇴행된 서울시의 여성·성평등 정책의 복원, 강화하기 위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2. 서울 지역에서 디지털 성폭력, 스토킹, 친밀한 관계 내 폭력 등 젠더폭력이 심화되는 가운데, 학교·기관·직장 내 예방과 피해지원 체계 강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피해자 지원기관 및 현장과의 실질적 협력체계 구축, 여성건강·이주여성 지원기관에 대한 안정적 지원이 필요하고, 여성폭력 피해자의 자립 과정에서 높은 임대료와 실효성 낮은 공공임대주택 제도로 주거 불안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 후보님은 젠더폭력 방지를 위해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너머서울

1.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어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간주하는 내용으로 개정 노조법 2조가 입법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업무를 위탁받은 민간위탁 노동자가 원청인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지방자치단체장은 민간위탁 노동자와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단체협약안을 체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공공부문이 먼저 '모범사용자'로서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강하게 요구됩니다.
 - 서울시가 간접고용하고 있는 민간위탁 노동자,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서울시 설립한 지원기관 등 노동자의 '진짜사장'으로서 해당 노동자들의 단체교섭 요구를 보장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2. 서울디지털산업단지는 최초의 국가산업단지인 14만여 명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서울의 가장 대표적인 노동자 밀집지역이다. 또한 50인 미만 작은사업장의 비중이 압도적이고 노동조합 조직률도 매우 낮은 편이라 서울시 차원의 적극적인 노동정책이 요구되는 곳입니다. 주얼리, 봉제, 제화, 인쇄 등 도심제조업 밀집지역 역시 비슷한 이유로 노동권 보장을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됩니다.
 - 후보님은 해당 지역의 거버넌스 구축 등 서울디지털산업단지와 도심제조업 밀집지역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3. 서울의 무주택 세입자 가구의 68.9%가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고 있지만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전체 주택의 7.7%에 불과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 시급하게 요구됩니다.
 - 후보님은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가

지고 있습니까?

4. 서울은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세입자 비율이 높은 도시입니다. 또한 가장 많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발생했고 전월세 증가폭과 세입자 주거불안이 심각해 세입자 권리 강화 중심의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 후보님은 세입자들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회적협동조합 한강

1. 오세훈시장의 한강버스, 노들섬 예술섬 개발을 비롯한 그레이트 한강 사업은 환경, 안전, 경제성, 행정 절차 등에서 심각한 상황인 바 전면 재검토와 백지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이에 대한 후보님의 의견은 밝혀주시고, 어떤 조치를 하실 계획입니까?
2. 파리시의 안 이달고 전 시장의 '보행자 중심·친환경 도시' 정책은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프로젝트가 '파리 플라쥬(Paris Plages, 파리 해변)'인데, 세느강의 수질을 개선해 올림픽 수영 경기를 개최하겠다는 담대한 계획은 정책의 신선함뿐만 아니라 희망의 메시지로써 환호를 받았습니다.
- 후보님은 한강의 자연성회복, 한강의 시민성 강화라는 목표를 위해 '수영하는 한강', '파리시 해변(70m x 20m)의 100배 모래밭 조성'을 공약화 해주시겠습니까?
 - 한강에서는 1960년까지 해운대 해수욕장의 700배에 해당하는 모래밭이 있었고 20만명의 시민들이 강수욕을 즐기기도 했습니다. 그 때 모래밭의 1/100 수준이라도 회복시킬 의향이 있으신가요?

한국사회연대경제

1. 서울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복원

서울시 사회연대경제 정책과 예산은 오세훈 시장 시절 급격하게 축소되었습니다. 이에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 행안부 정책과 연계하여 서울시에 사회연대경제국 신설등을 공약으로 담아주실 수 있는지요.
- 서울 사회연대경제지원센터와 25개 자치구 센터 간 사업적 연계 방안에 대해 계획이 있으신가요?
- 서울 민간의 주체들과 기획 단계부터 함께하는 민관 협의 구조에 대한 생각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2. 사회연대경제 금융 활성화

사회연대경제는 시장경제의 한계를 보완하고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대안적 경제 모델로 불평등, 양극화, 고용위기, 지역소멸, 기후위기와 같은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문제에 직면하여 전세계적으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돌봄, 먹거리, 주택, 일자리 등 시민의 삶의 질과 직접 연관된 분야에서 사회연대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향후 3-5조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사회연대경제가 정책의 변화에 관계없이 성장하려면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이 필요합니다.

- 후보께서 사회적금융 확대를 공약으로 담아주실 수 있는지,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